참사 그새 잊었나…아파트 공사현장 구조물 휘어져 '허걱'

광주 화정 '아델리움57' 비계 휘어지고 자재 추락 사고 발생
동구 지산동·여수 등서도 철거 중 무너짐 사고로 작업자 부상

광주·전남지역 건설 현장 내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2021년)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2022년)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델리움57'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공사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 비계가 휘어지고 일부 건설 자재가 약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점심시간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비계는 작업자가 올라가 외벽 마감 및 기타 시공 작업을 하도록 발판이 갖춰진 구조물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5층(연면적 1만 647㎡·28세대)규모로, 당초 준공 예정 시기는 오는 7월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85%다.

당시 현장에서는 4월중으로 예고된 가설 구조물 안전 점검을 앞두고 일부 비계 하단부에 대한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관할청인 서구는 작업자가 일부 비계 구조물 간 연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수·보강 작업을 하다 비계 연결부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비계가 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는 문제가 발생한 비계 전체를 철거한 뒤 재시공할 방침이며, 관할청인 서구는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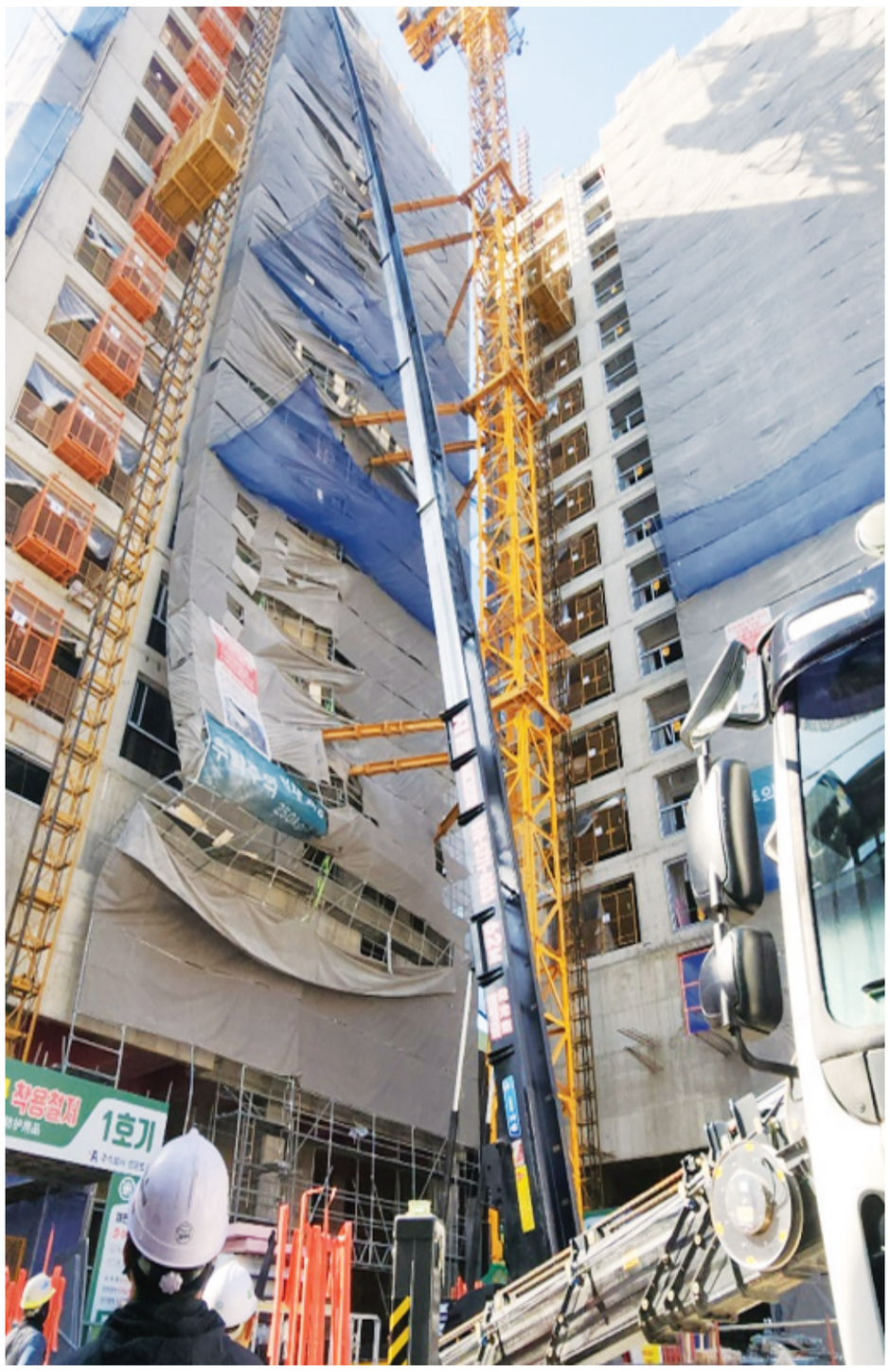
지난 5일에는 여수시 거북선공원 인근 지상 5층 규모의 사우나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 중 외벽 무너짐이 발생해 아래 주차된 트럭이 파손됐다.

지난달 25일에도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상 2층 규모의 옛 한의원 건물 철거 과정에서 현장에 쌓여 있던 콘크리트 등 잔해물이 인도를 덮치고 도로쪽으로 쏟아져 현장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시민들은 건축물 붕괴에 대한 트라우마가 학동참사와 화정아이파크 사고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며 "작은 사고라도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18건으로, 이로 인해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사망자 12명), 2023년 8건(8명), 2024년 3건(3명) 등이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델리움57' 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가 휘어져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5월 단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가능할까

신군부 부정 축재 환수위 구성…실효성 의문도

5월 단체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 찾기에 나섰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13명의 동의를 얻어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신군부 재산을 환수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는 원순석 기념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재산 추적·환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이중 1338억원이 집행됐고 미납금은 867억여원(39.3%)이다.

지난 1997년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원을 즉시 추징했다. 이후 2003년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 이순자씨가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금 납부가 없었다가 추징 시효가 끝나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추징금 환수에 불이 붙었다.

국민적 여론과 검찰의 압박으로 전씨 측은 장남 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해 현재 867억원이 추징금으로 남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실상은

3년간 384건 중 80% 폭행·협박 없이 당해

최근 3년간 성폭력을 당한 장애여성 중 80%는 폭행·협박조차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여상보협)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장애여성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384건의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직접적 폭행·협박 없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307건으로 80%에 달했다. 직접적 폭행·협박을 당한 경우는 69건(17%), 미파악 8건(3%) 등이었다. 이 중 검찰·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160건으로, '장애인 강간' 60건(37.5%), 장애인 강제추행 46건(29%) 순이었다.

피해 당시 상황에서는 강요를 당한 경우가 102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회유 75건(14.9%), 속임 56건(11.2%), 지위 이용 42건(8.4%) 등 사례가 이어졌다.

신고 건수 중 291건은 불송치, 56건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이 168건(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거불충분' 132건(29.6%),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음' 34건(7.6%) 등이었다.

한편 전여상보협은 이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7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4·9 캠페인'을 개최했다.

전여상보협은 2009년 4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매년 4월 둘째주를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으로 정하고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젠더기반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여순사건 조사위 기획단 활동 종료

2기 단원 구성 방안은 아직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1기 활동을 마쳤다.

9일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기획단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1기 활동을 종료했다.

기획단은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종료 시점에는 모두 13명이 활동했다.

앞서 기획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와 뉴라이트 계열 인사 등이 상당수 포함돼 해당 단원을 해촉하라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2기 단원은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기존 단원 위주로 재구성할지, 새로운 인사로 채울지 등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유족과 전남도 등은 1기 단원 해산과 함께 중립적인 인사로 기획단을 전면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서 한 달 새 노동자 5명 사망…대책 마련을

최근 전남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9일 순천시 해룡면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무대책, 노동부의 형식적인 대책에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지방노동청장이 A사업장 광주 공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지 하루 뒤인 장성공장에서 노동자가 협착으로 사망했다"며 "지난달 발생한 5건의 사망 사고 유형도 끼임, 추락 등 다양하게 나타나 구조적 안전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전남도는 사고가 날 때마다 유감 수준의 대응에 그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